

그리스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1.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5
IV. 국제신인도	7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132천 km ²	G D P	3,056억 달러
인구	11.18백만명	1 인 당 GDP	27,044달러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Euro (EUR)
대외정책	EU 역내 우호관계 유지 중점	환율(달러당)	0.75

- 그리스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한 국가로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및 불가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3에 해당하며 약 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
- 2009년 10월 새로 출범한 사회당(PASOK) 정부는 그리스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2.7%, 정부채무가 GDP의 113.4%에 달한다고 공개한 이후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촉발됨.
- 그리스는 IMF 및 EU로부터 2010년 5월 1,100억 유로, 2011년 7월 1,090억 유로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구제금융 지원조건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긴축재정정책, 국유자산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리스는 1952년에 NATO에 가입했으며, 1981년 및 2001년에 각각 EU 및 유로존에 가입함.

II. 경제동향

1.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그리스 금융부문, 유동성 부족현상 지속

- 그리스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부실대출 증가, 국채보유에 따른 손실 등으로 유동성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그리스 금융부문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2011년 7월 15일에 실시된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제2차 재무건전성평가(stress test)에서 총 91개 은행 중 7개 은행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그리스의 Agricultural Bank 및 EFG Eurobank 두 개 은행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 또한, 2011년 8월 29일 EFG Eurobank는 기본자본비율(Tier 1 capital ratio) 기준 충족을 위해 그리스의 Alpha Bank와 합병할 계획임을 발표함.

□ 유럽 경제권에 편중된 무역구조 형성

- 그리스는 유럽 경제권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EU 회원국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무역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2010년 기준 유럽 경제권이 그리스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8%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 독일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12% 및 14%를 차지하며 독일이 단일국가로는 최대 무역상대국인 것으로 분석됨 (EIU, Country Report, September 2011).

* 주요 수출대상국('10): 독일(12%), 이탈리아(11%), 사이프러스(7%), 불가리아(7%), 미국(5%), 영국(5%), 터키(4%)

* 주요 수입대상국('10): 독일(14%), 이탈리아(13%), 중국(7%), 프랑스(6%), 네덜란드(6%), 벨기에(5%), 스페인(4%)

나. 성장 잠재력

□ 글로벌 경기침체 및 그리스 재정위기로 2008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 위축

- 2008년 말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 2010년 초 발발한 그리스 재정위기로 2008년 이후 FDI 유입이 위축되었는데, 2008년에 44.8억 달러를 기록한 FDI 유입액이 2009~10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46%, 10% 감소한 24.4억 달러, 21.9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침.
- 그리스 재정위기 여파 지속으로 인한 투자신뢰도 하락에 따라 FDI 유입액은 2011년에도 전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기업경영여건 평가순위 중하위권 유지

- 매년 국제금융공사(IFC)가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 rating)에서 그리스는 2009년 97/183에서 2010년 109/183로 평가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전년보다 하락하며 중하위권 평가순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는 계약실행 부문에서 경영여건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계약실행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경영여건이 종전 대비 유지되거나 악화됨에 따라 종합순위는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다. 정책성과

□ 사회당(PASOK) 정부, 과거 정부들의 통계수치 조작사실 공개

- 2009년 10월 총선 결과 집권여당으로 출범하게 된 사회당(PASOK) 정부는 이전 정부들의 통계수치 조작사실을 공개하며 그리스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2.7%이고 정부채무가 GDP의 113.4%인 2,693억 유로에 달한다고 밝힘.

○ 그리스 정부는 2001년 유로존 가입 당시 정부채무 등의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유로존 가입 이후에도 재정개혁을 소홀히 하였으며 선심성 경제정책을 남발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남.

* EU의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European Union: TEU)과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에서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을 3% 이내, 정부채무 비중을 60% 이내로 억제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음.

○ 그리스의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 및 정부채무 규모가 공개됨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외채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촉발됨.

□ 그리스 의회, 정부의 2011~15년 중기재정계획 법안 의결했으나 실현 가능성 회의적

○ 2011년 6월 29일 그리스 정부는 세수확대, 정부지출 축소,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1~15년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Fiscal Strategy: MFST)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그리스 의회는 6월 30일에 동 법안을 의결함.

* 2011~15년 중기재정계획 법안은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의회에서 통과됨.

○ 2011~15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그리스 정부는 2015년까지 정부예산을 280억 유로 절감하고 국유자산 민영화를 통해 재정수입을 500억 유로 증대시킬 계획임. 동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2010년 GDP의 10.4%에서 2015년 GDP의 0.7%로 총 9.7% 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EIU 및 D&B는 그리스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기반이 더욱 약화될 것이며 EU 및 IMF의 구제금융 지원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당하여 그리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의 성공적인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긴축재정정책 지속으로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

- 그리스 정부는 2010년 5월에 맺은 IMF 및 EU의 구제금융 협정의 조건인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공공부문 임금 및 인력삭감, 세금 인상, 국유자산 민영화 등의 강도 높은 긴축안을 시행함에 따라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급락하였음.
- 사회당(PASOK)은 2009년 10월 총선 당시 44%의 득표율(의회의석 총 300석 중 160석 차지)로 집권여당이 되었으나, 2011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이 11%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

□ 연이은 집권여당 의원의 탈퇴로 정권기반 약화

- 2009년 10월 총선에서 집권한 사회당(PASOK)은 IMF 및 EU의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을 위해 국유자산 민영화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2011년 9월 현재까지 총 6명의 의원들이 탈퇴를 선언함.
- 이에 따라 집권 당시의 사회당 정부는 의회의석 300석 중 160석을 차지했으나 현재 154석으로 의석수가 줄었으며 의원 탈퇴가 이어질 경우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할 여지가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긴축재정정책 및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 빈번

- 그리스 정부는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삭감 등을 포함한 긴축재정정책 및 국유자산 민영화를 추진하였지만, 공공부문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 불안정이 초래됨.

- 2011년 6월 28일에는 그리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11~15 중기재정 계획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그리스 국민 수천명이 의회 앞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함. 이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삭감, 국유자산 민영화 등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으며, 6월 30일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긴축재정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높은 실업률로 사회불안 초래

- 그리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재정위기 대처방안으로서의 정부의 긴축재정정책 시행, 외국인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여 2010년에 12.5%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 2분기에는 16.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실업률 변동추이: 7.7%(2008) → 9.4%(2009) → 12.5%(2010) → 17.0% (2011 전망치)

-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불안이 초래됨.

3. 국제관계

□ EU 회원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역점을 주는 대외정책 표방

- 그리스 정부는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상환을 위해 EU, IMF 등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을 위한 각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EU 회원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역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독일 등 EU 주요 회원국에서는 그리스 지원에 대한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그리스 정부의 외채상환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터키 및 마케도니아와 긴장관계 지속

- 터키와는 사이프러스를 두고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마케도니아와는 그리스에 마케도니아의 NATO 및 EU 가입을 반대함에 따라 긴장상태가 계속됨.

* 그리스는 1981년에 EU 회원국이 되었으며 사이프러스와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터키의 EU 가입에 반대하고 있어 터키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11년 7월, EU 및 IMF는 그리스에 대해 2차 구제금융 지원 합의

- 2011년 6월 30일 그리스 의회가 정부에서 제출한 재정긴축안을 의결함에 따라 EU 및 IMF는 1,10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 중 5회차 지출예정분 120억 유로의 집행을 승인하였으며 7월 21일에는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합의함.

* 2차 구제금융의 주요 내용은 EU와 IMF가 공동으로 1,090억 유로를 지원하며 대출금리를 종전의 4.5~5.8%에서 3.5%로 인하하고 기발행된 국채(1,350억 유로 상당)의 평균 상환기간을 7.5년에서 15년(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2차 구제금융 지원 합의로 그리스는 2011년 7~8월에 만기도래하는 국채를 상환할 수 있게 돼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위험을 일단 넘길 수 있었으나, 유로존 역대 구제금융 지원여부와 그리스 정부의 획기적인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그리스 정부채무는 GDP의 140% 상회하는 높은 수준

- 2011년 7월 21일 EU와 IMF는 그리스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및 기발행 국채의 평균 상환기간 연장 방안을 포함하는 2차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함에 따라 그리스 정부의 외채 원리금상환 부담이 일단 경감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그리스 정부채무는 2010년 말 기준으로 GDP의 1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2011년 말 기준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이 15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전히 그리스의 정부채무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됨.

*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 110.7%(2008)→127.5%(2009)→142.7%(2010)→158.2%(2011 전망)

□ 기일도래 외채상환을 EU 등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해결

- 그리스는 기일이 도래하는 외채상환을 위해 EU 등의 긴급 구제금융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국채 발행으로 기일도래 외채를 상환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기일이 도래하는 정부채무의 상환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은 디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

-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그리스 재정위기 발발로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9년 말 이후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수차례 하향조정하였으며 2011년 9월 기준으로 그리스 신용등급은 디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S&P는 2009년 12월 16일에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하향조정한 데 이어 2010년 4월 27일에는 BB+로 세 단계 하향조정함. S&P는 2011년 들어서도 3월에 그리스 정부의 채무조정 가능성을 반영하여 BB-로 평가했고, 5월 9일에는 B, 6월 13일에는 CCC로 각각 하향조정함. 이어 7월 21일에 그리스에 대한 EU 및 IMF의 2차 구제금융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도 S&P는 7월 27일에 그리스 신용등급을 CC로 하향조정하여 채무불이행 직전 단계로 평가함.
- Moody's는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2009년 12월 22일에 A1에서 A2로, 2010년 4월 22일에 A3로, 6월 14일에 Ba1으로 각각 하향조정함. 이후 2011년 3월 7일에 B1, 6월 1일에 Caa1으로 추가적으로 하향조정했으며 2차 구제금융 합의 이후인 7월 25일에는 민간투자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그리스 신용등급을 Ca로 하향조정함.

<표 1>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1.9.)	A (OECD등급 원용)
OECD ^{주)}	0등급 (2011.1.)	0등급 (2010.1.)
S&P	CC (2011.7.)	CCC (2011.6.)
Moody's	Ca (2011.7.)	Caa1 (2011.6.)
Fitch	CCC (2011.7.)	B+ (2011.5.)

주) OECD는 OECD 회원국 및 유로존 가입국이면서 세계은행 분류 고속득국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고 0등급을 부여함.

- Fitch는 2009년 10월 22일 및 12월 8일에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각각 A에서 A-으로, A-에서 BBB+로 하향조정했으며 2010년 4월에는 BBB-로 추가 하향조정함. 또 2011년 5월 20일에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3단계 하향조정했으며 2011년 7월 13일에는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 지연, 그리스의 거시경제 전망 악화 등을 이유로 그리스 신용등급을 CCC로 추가 하향조정하며 디폴트에 준하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음.

□ 그리스 재정위기 발발 이후 국채수익률 및 CDS 프리미엄은 급등 지속

- 그리스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07~09년 7월 평균 각각 4.53%, 4.74%, 3.33%를 기록했으나 2009년 말 그리스의 정부채무 규모가 공개되고 국가부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2010년 7월에는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0.66%로 상승하였으며 2011년 7월에는 19.98%를 기록함. 2011년 8월에는 그리스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9.1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9월에는 평균(1일부터 19일까지의 평균치) 25.89%를 기록하며 급등세를 재현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리스의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2008년 9월 이전에는 50bp 수준에서 형성되었으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하여 2009년에는 300bp 수준에서 형성됨. 2009년 말에 그리스 재정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2010년 들어 그리스 CDS 프리미엄이 더욱 상승하여 2010년 6월 24일에는 2008년 1월 이후 최고치인 1,126bp를 기록했으며 2011년 들어서도 상승추세가 지속되며 2011년 9월 13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3,500bp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bank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전액 단기인수 가능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1년 4월 5일 (북한과는 미수교)

- 양국간 수교 역사는 긴 편이며, 무역, 과학기술, 항공, 관광 등 다양한 방면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음.

* 한국-그리스 주요 협정체결 현황

- : 무역협정(1971), 과학기술협정(1987), 항공협정(1995), 투자보장협정(1995), 이종과세방지협정(1995), 관광협정(2006), 해상협정(2006)

□ 2010년 대 그리스 교역규모 감소

- 2008년 하반기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침체 및 2009년 말에 발발한 그리스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대 그리스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60.4% 급감한 12.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1~8월 중 대 그리스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9.9억 달러(2010년 1~8월 중 교역규모는 9.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

- 2010년 말 기준 그리스는 우리나라의 50위 수출대상국, 85위 수입대상국임.

* 한국-그리스 교역규모 추이

: 15.4억 달러(2008)→32.6억 달러(2009)→12.9억 달러(2010)

* 대 그리스 수출: 14.1억 달러(2008), 32.0억 달러(2009), 12.1억 달러(2010)

* 대 그리스 수입: 1.3억 달러(2008), 0.6억 달러(2009), 0.8억 달러(2010)

□ 해외직접투자현황(2011년 6월 말): 10건, 7.8백만 달러(누계 기준)

- 우리나라의 대 그리스 직접투자실적은 2011년 6월 말 누계기준으로 10건, 7.8백만 달러로 직접투자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표 2> 한·그리스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08	2009	2010	주요품목
수 출	1,413	3,203	1,209	식료품, 선박, 석유제품, 화학제품, 섬유
수 입	130	56	82	기계류, 운송장비, 연료, 화학제품
합 계	1,543	3,259	1,291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2009년 10월 사회당 신정부가 그리스의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2.7%, 정부채무가 GDP의 113.4%에 달한다고 공개한 이후 재정수지 적자 누증, 정부채무 누적 등에 따른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리스 재정위기가 초래됨. 그리스 국가부도 가능성이 확산되며 그리스의 국제수익률 스프레드와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고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연이어 그리스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여 2011년 9월 현재 그리스 신용등급은 디폴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됨.
- 2010년 3월 그리스는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EU와 IMF는 2010년 5월과 2011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함. 또 그리스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2011~15년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2011년 6월 말 의회에서 동 법안이 의결됨.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기반 약화, 2차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그리스 정부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그리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의 성공적인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또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건축재정정책 지속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의 건축재정정책 및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그리스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음.

조사역 최 희 정 (☎02-3779-5711)
E-mail: heej_choi@koreaexim.go.kr